

‘흉물’ 지산유원지 방치 언제까지...

상가 절반 줄고 시설 폐허 ... 쓰레기 악취 ‘몸살’

광주시·동구청 활성화 적극 나서야

광주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였던 광주 지산유원지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문화수도 광주의 흉물로 전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폐허가 된 상가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오물과 악취로 사용이 불가능해 외국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75년 민간투자자로 문을 연 지산유원지는 1995년 첫 사업자인 호남관광개발, 대의산업(97년)의 잇단 부도로 현재(주)나경인터내셔널(이하 나경)측에서 주요 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상가 등 대부분의 시설이 폐쇄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 때 20여 곳에 달했던 음식점들이 절반 가량으로 준데다 관리마저 제대로 안 돼 건물이 폐허로 전락하고 있다. 유원지의 대표적인 위락 시설인 ‘뚝방 저수지’는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부엽토가 부패하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

유원지의 명물이었던 향로봉 팔각정과 폐쇄된 상가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돼 썩어가고 있으며 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 오물과 악취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런 데도 관할 기관인 광주시와 동구청은 부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가 없어 유원지의 개발·관리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유원지 부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체가 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무등파크호텔 등 유원지 내 주요시설을 소유한 나경측은 부지의 33.2%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유지가 65.7%, 국·공유지 1.1% 등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공공재인 지산유원지의 개발 주체가 있따라 변경됐음에도 뚜렷한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게 유원지 상인들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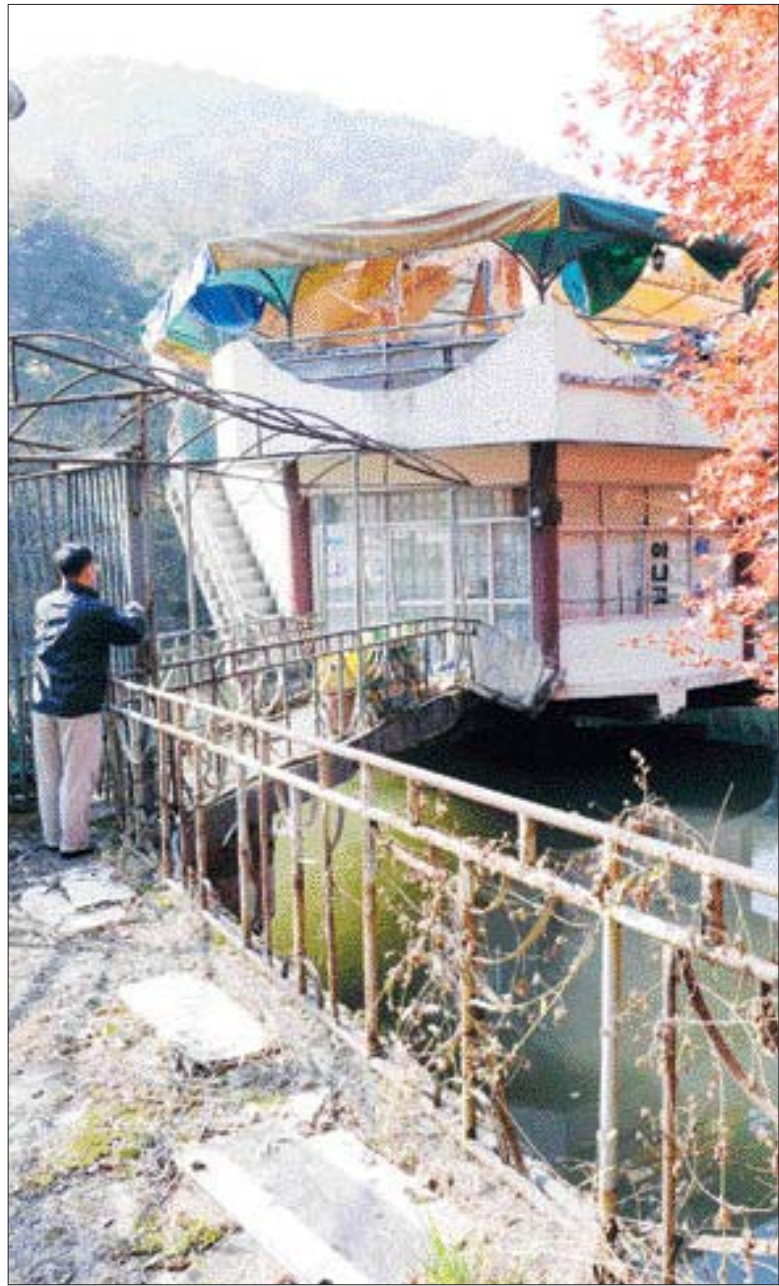
정홍철(65) 지산유원지 발전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도 탓도 있지만 광주시가 지산유원지 문제를 수수방관해왔다”며 “이제라도 광주시가 방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산유원지 발전추진위원회는 현재 광주시에 지산유원지 활성화 건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나경측 관계자는 “유원지 개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원을 잃어 상가와 쓰레기를 무작정 치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그렇다고 법정 부지 소유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 구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원지 지정을 해제해 부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폐허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 내 ‘뚝방 저수지’의 한 음식점이 10여 년 전 폐쇄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지붕을 덮은 포장이 찢겨지는 등 폐허로 변해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도지사·의원·각계 전문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발 거세

한나라, 시·도지사정책협의회 갈등 확산

여권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등 지방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으나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는 등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이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시도지사정책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공급적으로 수도권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며 획기적인 지방발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박광태 광주시장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외면

하고 수도권을 살리는 수도권만을 위한 정부”라며 “정부 정책이 국민을 외면하면 여당이 과감히 교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세계 어느 나라가 수도권 일원에 모든 SOC가 집약되고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가”고 반문한 뒤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다”고 성토했다.

김법일 대구시장은 “정부는 40여 년 가까이 유지해온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갑자기 바꾸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호 대전시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 제조업체 몇 개가 들어오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수도권의 집

중도를 완화해 지방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시도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경쟁력 부족의 원인을 ‘규제’에서만 찾고 혼잡·과밀·고지가·낮은 생산성 등에 의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구,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것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배경 설명과 지방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울촌산단 자유무역지역 탈락”

이번 주 발표, 울산산단 포함 될 듯 ... 전남도 투자유치 타격

이번 주중 발표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울산산단이 포함되고 울촌산단이 탈락할 것으로 알려져 전남도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와 대중국 수출선 확보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울산산단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은 울산산단 외에 마산과 김제산단에 자유무역지역에 추가 지정될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반면 울촌산단은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기획예산처에 보

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신청 도시 가운데 울산과 마산, 울진, 김제 등 4곳을 우선대상지로 선정해 심사해 왔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 투자 유치와 대중국 수출선 확보를 위해 울촌산단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꾸준한 건의

해왔던 전남도의 전략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공기관 자재 분리 발주 확대

정부, 中企 지원 대책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의 분리 발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조달청, 중소기업청은 10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공감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많은 정책이 있지만 정책이 바닥까지 흘러 내려오는 게 관건”이라며 “좋은 정책을 아무리 쓰더라도 제 때 되느냐, 제대로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남뉴스

(2면으로 계속)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부지구 M타워 5층
062-352-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062-352-1111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성학원
교육상담: (061) 352-1111
홈페이지: http://www.hscenter.co.kr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는 호남권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배경
- 2.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목적
- 3.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분야
- 4.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일정
- 5.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